

17개월만에 출구 보이는 의정갈등 “의료 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 필요”

의대협, 의대생 전면 복귀 선언
복귀 유도 특례 형평성 논란 우려
학사운영 제도적 방안 ‘과제’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년 5개월 넘게 동맹휴학을 이어온 전국 의대생들이 전격적인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장기화된 의대 교육 파행 사태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유급 처분을 앞둔 대규모 학생들과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 의과대학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맹휴학 돌입 이후 약 500일 만에 나온 전면 복귀 선언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 당시 무너졌던 신뢰 관계를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 회복해왔다”며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이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복귀 선언이 곧바로 학사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약 1만 9000여명 중 42%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제적 대상도 46명에 이른다. 특히 의대 학사 운영은 연 단위로 구성돼 있어, 1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이 2학기에 복학하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일부 대학은 유급·제적 처분을 학기 말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처리를 잠정 연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복귀에 따라 ‘학사 유연화’ 등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귀와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귀 방안을 마련하되, 성적 사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학사 유예나 특례보다는 각 대학의 재량에 따른 유동적 복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전공

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적인 특례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기존 수련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의대생 복귀 선언을 계기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귀 선언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방안”이라며 “정부는 단기 봉합이 아닌, 의료 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총력

여름철 ‘학생 안전 종합대책’ 시행
폭염사고, 물놀이 예방 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여름철 학생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효 등 여름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교 안팎에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특히 화재와 폭염, 물놀이 등 여름철에

취약한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소방청과 협업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정 연계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해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 연계 교육 자료를 통해 폭염 시 대응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활용한 집중 교육이 전개된다. 방학 중 운영되는 기숙사 및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강화되며, 늘봄학교 및 방학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교내의 순찰과 출결 관리 등을 통해 운영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해 통학로 침수 우려 지역과 학교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각 부처와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분담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하고, 가정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여름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I튜터부터 논술까지… 서울런 콘텐츠 진화

맞춤진단·지원 등 학습서비스 확장
다자녀가구, 지역아동센터 대상 확대

‘서울런’이 학습 콘텐츠, 대상, 특화 지원 등 전 분야를 보강하고 또 한 단계 발돋움한다. 실시간 AI 튜터, 1대1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지원체계 등 고도화된 학습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넓어진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런’을 개별 학습 격차까지 세심하게 보완해주는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은 기존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 학습사이트에서 유명 강사의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은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춘 진도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다. 신청자에게는 유해 콘텐츠 접근이 차단된 전용 학습기와 펜, 홈런 중등 전용 교재가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패스트캠퍼스가 새롭게 서울런에 합류한다. 중학생은 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AI 이론·실습 기반 강좌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보다 전문적인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대상으로 AI 공부앱 ‘قان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튜터 서비스가 도입됐다.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전문 강사의 동영상 풀이 등이 상시 신속하게 제공된다.

1대1 논술 멘토링도 시범운영한다.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 역량을 갖춘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1대1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민간후원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까지 서울런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올 하반기 사교육비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에게 서울런을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지역화폐 소비쿠폰, 신용카드처럼 쓴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적 완화
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허용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카드 사용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주요 지급수단 중 하나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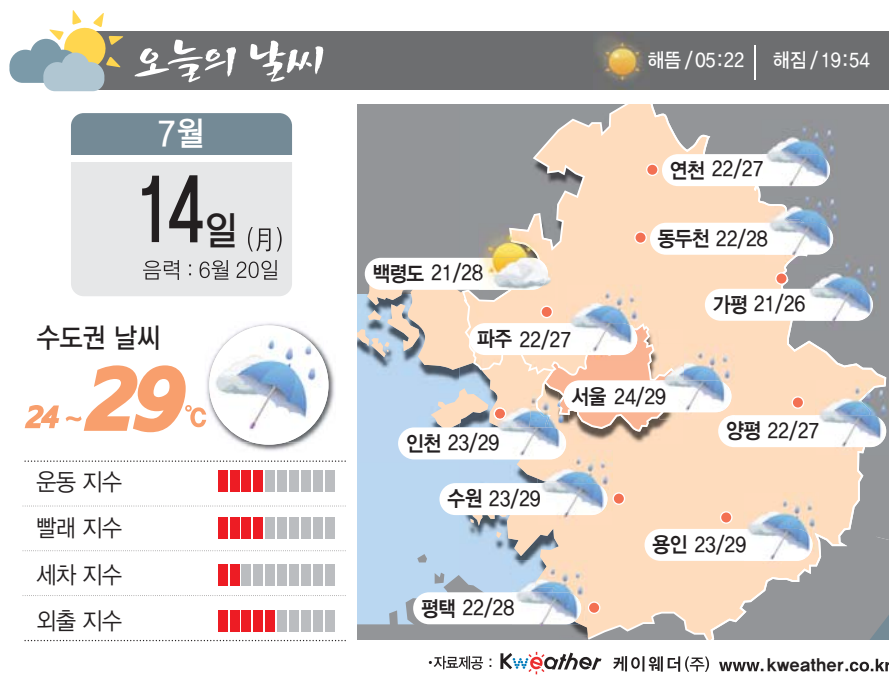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

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트럼프 “EU·멕시코에 8월부터 30% 상호관세 부과” /사진 뉴시스

▲트럼프 “엡스타인 음모론 멈춰야…정부 압박해선 안돼”

▲러 외무 “푸틴, 곧 접촉 희망” 김정은 “특별하고 굳건한 동맹”

▲이란 “IAEA 협력 중단 안해…핵시설 사찰은 ‘사례별 검토’”

▲중국 국방부 “일본 경찰기 근접 정찰이 갈등 원인”

▲미얀마 반군 공격에 정부군·민간인 500여명 태국으로 피신